지방행정연구 제38권 제2호(통권 137호) 2024. 6. 253~284
DOI http://dx.doi.org/10.22783/krila.2024.38.2.253

교정시설에 대한 수용도의 영향요인
: 부산광역시 교정시설 입지 사례

Influence Factors of Acceptability for Correctional Facilities
: A Case Study of Facility Siting in Busan Metropolitan City

김 재 식*·정 혜 진**
Kim, Jaesik·Jung, Hyejin

목 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 설계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교정시설은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갈등을 야기하는 비선호시설로 인식되고 있다. 그 동안 교정시설과 관련된 연구들은 대부분 갈등의 영향요인을 다루었으나,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 교정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수용 수준과 영향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입지 대상지 지역 주민과 일반 시민 대상 2,000명을 대상으로 수행된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였다. 일반화된 순서형 로지스틱의 분석에서는 수용시설로 인한 잠재적 손해는 모든 범주 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용시설 주변 거주 경험과 잠재적 효용은 교정시설에 대한 수용도를 모든 범주 내에서 긍정적으로 높이는 것으로 도출되었으며, 잠재적 효용은 수용도를 가장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노후화된 교정시설의 이전 및 신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향후 교정시설에 대한 수용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주제어: 교정시설, 비선호시설, 일반화된 순서형 로지스틱

* 제1저자, 충남대학교 건축학과 박사과정
** 교신저자, 부산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
논문 접수일: 2024. 2. 26. 심사기간: 2024. 2. 26. ~ 2024. 6. 20. 게재확정일: 2024. 6. 20.

Despite correctional facilities being designed to aid in the successful reintegration of inmates into society, they are often perceived as locally unwanted land use facilities that generate public conflict. While previous research on correctional facilities has primarily focused on the factors influencing such conflicts,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level of acceptance and the influencing factors regarding correctional facilities among the citizens of Busan Metropolitan City. A survey was conducted with 2,000 participants, including both local residents in areas targeted for facility location and general citizens. Generalized ordere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indicated that the potential damage caused by such facilities had a negative impact across all categories. Conversely, previous experience living near a correctional facility and the potential benefits were found to positively influence acceptance across all categories, with potential benefits having the most substantial effect on increasing acceptance levels. This study offers policy recommendations to improve the acceptance of correctional facilities, particularly in light of the growing necessity to relocate and construct new facilities to replace outdated ones.

□ Keywords: Correctional Facilities, Locally Unwanted Land Use Facilities, Generalized Ordinal Logistic Regression

Ⅰ. 서론

사회 내 범죄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교정시설[1]은 공공건축의 일부분으로 간주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Farrinton, 1992), 국내에서 교정시설의 현대화를 두고 공공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이는 교정시설이 수용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갈등을 야기하는 비선호시설로 인식되기 때문이다(김민영 외, 2018). 더욱이 국내 교정시설의 노후화 및 과밀화로 인해 새로운 교정시설의 건립 또는 이전이 필요해지면서 교정시설 입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갈등이 확산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민영 교도소를 제외하고 국내 교정시설 경과 연수를 살펴보면, 전체 53개 가운데 40년 이상 경과된 시설이 16개(30.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30년 이상 된 시설이 27개소(51.0%)로 절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다(법무부, 2023).

이처럼 절반 이상의 교정시설이 30년 전에 건립되었기 때문에 수용할 수 있는 면적의 한계와 더불어 수용자의 지속적인 증가는 과밀 수용 문제로 이어진다. 2023년 8월을 기준으로 수용 정원은 49,600명인데 반해 수용 현원은 58,133명으로, 수용률이 117.2%에 달했다(법률신문, 2023).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문제는 30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로서 수용자의 인권침해와 교정 행정 및 교정 처우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안성훈 외, 2017).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문제가 법적인 문제로까지 이어지게 된 계기는 2016년 헌법재판소[2]에서 구치소 내 수용실 면적이 지나치게 좁아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 당한 것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온 이후부터이다. 2022년 대법원에서는[3] 수용자를 1인당 면적이 2㎡ 미만인 거실에 수용한 것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했다는 점에서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교정시설의 노후화 및 과밀수용을 해결하기 위한 신축 또는 이전이 논의됨에 따라 국내에서 교정시설 입지에 대한 선행연구가 다수 이루어졌다. 교정시설과 관련된 공공갈등과

---

1) 교정시설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약칭: 형집행법)에 따라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를 의미한다. 교도소는 징역형·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형이 확정이 된 사람과 노역장 유치 명령을 받은 수용자가 거주하는 시설이며, 구치소는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미결수용자를 수용하는 시설이다(법무부, 2023). 2022년을 기준으로 판결 확정 전인 미결수용자의 구금확보를 위해 운영되는 구치소는 11개, 형이 확정된 수형자를 수용하는 교도소는 전국에 39개, 그 외 지소 3개와 민영 교도소를 포함하여 전국에는 54개 교정 시설이 설치 및 운영되고 있다(법무부, 2023).

2) 선고 2013헌마142, 2016. 12. 29 결정

3) 사건 번호 2017다266771 손해배상(기)

관련된 주요 연구 주제는 교정시설의 이전 및 갈등 사례(김민영 외, 2018; 송영삼, 2016; 2014; 김광구·이선우, 2013; 김영곤, 2012), 교정시설의 지역 기피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 연구(김민영 외, 2018; 유병철, 2016) 등이 존재한다. 이처럼 교정시설에 대한 갈등 및 수용 문제는 주로 사례 연구로 이루어졌다. 일부 연구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추진하였으나(김도연, 2011), 응답자가 100명 미만으로 매우 적거나 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설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김민영 외, 2018).

또한 교정시설의 현대화 및 입지 선정에 관한 논의는 기존의 비선호시설과 관련된 입지 갈등 및 수용 요인과 다소 차이가 존재한다. 쓰레기 매립장, 화장장 등과 같은 기존의 비선호시설들은 주로 외곽에 입지할 확률이 높다(김지수 외, 2016). 그러나 교정시설의 입지는 도심지역에 입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특징을 지닌다는 점에서(유병철, 2016), 기존의 비선호시설 연구를 직접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는 교정시설이 수사와 재판을 위한 검찰청 및 법원과의 거리가 가까워야 하고, 수용자를 면회하는 민원인, 변호인, 자원봉사자의 접근성이 높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수형자에게 사회정착에 필요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사회적응력을 높이고자 도입된 중간처우시설의 확대 역시 도심 지역에 입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권지혜, 2022), 주민들의 교정시설에 대한 수용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 교정시설의 현대화 또는 이전에 대한 시민들의 수용 수준과 영향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주관한 설문 조사를 활용하였다. 해당 설문 조사는 2023년 9월부터 10월까지 대면으로 이루어졌으며, 교정시설에 대한 인식도와 이전 및 현대화 사업에 대한 수용 수준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일반화된 순서형 로지스틱 분석 결과, 수용시설로 인한 잠재적 손해는 모든 범주 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용시설 주변 거주 경험과 잠재적 효용은 교정시설에 대한 수용도를 모든 범주 내에서 긍정적으로 높이는 것으로 도출되었으며, 잠재적 효용은 수용도를 가장 높일 수 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이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2장에서는 부산광역시 교정시설에 대한 입지 갈등의 현황을 살펴보고, 교정시설과 관련된 이론 및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제3장에서는 연구 설계 및 분석 방법에 대해 기술하고, 제4장에서는 일반화된 순서형 로지스틱 분석 결과를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교정시설의 입지 갈등을 예방하거나 원활하게 현대화 과정을 추진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부산의 교정시설 및 입지 갈등 현황

1) 부산 교정시설의 현황과 이전 필요성

부산의 교정시설에 대한 갈등은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의 현대화 필요성 증진에 따른 입지 선정 과정에서 시작되었다. 해당 교정시설의 노후화와 과밀 수용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구치소와 교도소를 통합하여 이전하거나, 각 시설을 확장하여 재건축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그러나 각 시설이 입지한 지역의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2007년부터 지금까지 교정시설의 입지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고 있다.

두 교정시설에 대한 입지 갈등을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 해당 시설에 대한 현황을 법무부(2023)의 교정통계연보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부산구치소는 수형자와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용자를 동시에 수용 및 관리하는 시설로서, 1973년 12월 20일에 지어져 2024년을 기준으로 51년이 경과되었다. 총 부지 면적은 99,485㎡에 달하며, 2023년 5월 기준으로 전체 정원 1,510명보다 많은 1,826명을 수용 중으로 수용률은 121.0%에 달한다. 한편, 부산교도소는 수형자와 재판 중인 항소심 미결수용자를 동시에 수용 관리하는 시설로서, 1977년 10월 10일에 준공되었으며 같은 해 기준 47년이 경과되었다. 총 면적은 126,924㎡로, 동년 기준 전체 정원 1,140명보다 많은 1,324명을 수용하고 있어 수용률이 116.1%이다. 전국의 최근 5년 교정시설 평균 수용률이 약 115.8%인 점을 감안한다면(법무부, 2023), 두 교정시설 모두 밀집도가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의 경우 수용자 1인당 도면상 면적이 2㎡에 미만인 공간에 수용하였다는 이유로, 부산고등법원은 2017년 국가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했다고 판단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소송의 원고들(구치소 수용 1인, 교도소 수용 1인)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다[4]. 법무부에서는 이를 다시 상고하였으나 2022년 대법원 판결에서 원심을 확정함으로써, 과밀한 교정시설 내에서의 수용행위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재차 확인하였다[5].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의 과밀 수용 문제는 코로나 19 기간 동안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더욱 심화되어 가석방 요건의 완화 등으로 밀집률을 낮추고자 하였으나, 특히 부산구치소의 수용률은 지속적으로 여전히 전국 평균보다 높

4)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7. 8. 31. 선고 2014나50975 판결

5) 사건 번호 2017다266771 손해배상(기)

은 수준이다(국제신문, 2022).

2) 부산 교정시설의 입지 갈등

부산 교정시설과 관련된 지역 내 입지 갈등은 교정시설 주변의 개발과 지역 주민의 재산권 문제로 인해 촉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는 각각 1973년과 1977년에 준공되었다. 상대적으로 외곽지역이었던 구치소는 인근 부근에 아파트가 입주하면서 주민들의 거부감이 심해지기 시작하였다. 2000년대 초반부터 사상구민 약 8만여 명이 서명운동을 벌이면서 법무부 “부산구치소 이전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 여론이 형성되었으며, 2005년부터 부산구치소 이전 논의가 금정구와 강서구 등의 여러 곳으로 확장되었으나 구치소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의 거부로 인해 무산되었다(부산일보, 2019).

부산구치소와 부산교정시설의 통합 이전 논의는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부산시와 법무부는 이전 후보지를 물색하여 강서구의 화전체육공원에 교도소와 구치소를 통합하여 이전하는 방안을 결정하였다(부산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 2023). 그러나 해당 지역은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주민들이 약 30여 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다는 점과 더불어 지역 상공계의 서부산권 장기 계획 차질 등의 문제를 들어 통합 이전에 대한 반대 의견이 제시되었다(중앙일보, 2007). 또한 2011년 11월에는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개발 사업이 중단되고, 주변 산업 단지에서 소음 및 악취로 인한 문제점이 생기자 법무부는 강서구 화전동으로의 이전을 재검토하게 되었다(부산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 2023).

이후 2012년 서부산 법조타운 내로 구치소를 이전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부산서부지원 개원과 관련한 법률 개정과 함께 명지국제신도시 내 부산 구치소의 이전이 논의되었으나, LH 공사에서 신도시 투자 손실 및 신규 분양에 대한 문제점을 들어 무산되었다(부산일보, 2013). 2016년에도 사상구 감전동 위생처리장을 지하화하고 해당 부지에 부산구치소를 신축하려고 하였으나, 2018년 부동산 시세 하락 및 교육 환경 저해 등을 이유로 무산되었다(연합뉴스, 2017). 2019년에는 부산시와 법무부가 강서구로 통합 이전하는 내용으로 MOU를 체결하였으나, 피해보상 없는 혐오시설 유치와 재산권 및 생존권에 대한 이유를 들어 강서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부산일보, 2019).

2007년 이후부터 교정시설 주변 주민들과 입지 선정으로 인해 갈등이 해결되지 않자, 2022년 부산시에서는 부산교정시설에 대한 주변 지역 발전 및 현대화 개발 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발주하였다. 용역 결과로 교정시설의 통합 이전 및 지역별 이전에 대한 두 가지 방안이 제시되었고, 2023년 5월 부산시는 각 방안에 대한 주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를 출범하였다. 같은 해 11월 입지선정위원회는 강서구와 사상구 및 일반

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145명이 참석한 숙의토론회를 거쳐 구치소와 교도소를 강서구로 통합이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부산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 2023). 그러나 여전히 강서구 시의원 및 구의원들은 입지선정위원회의 의사결정 효력과 실현성을 문제 삼아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부산 교정시설의 통합이전 입지 갈등은 2007년 강서구 화전동 이전 논의부터 2023년 입지선정위원회의 권고안 도출까지 약 16년 동안 이어져 왔다. 〈표 1〉은 부산 교정시설 입지 선정과 관련한 주요 추진 사항을 정리한 내용이다.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부산시와 법무부, LH, 주요 기관과의 양해각서(MOU) 등을 체결함으로써 부산 교정시설의 과밀화와 노후화를 해결하기 위해 신축 및 통합 이전이 주로 논의되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부산시와 법무부의 입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 및 생활 환경 개선 등에 대한 논의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도시관리계획 등의 변경은 부산시가 결정할 수 있지만, 착공 준공 승인권은 해당 기초자치단체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할 경우 교정시설의 이전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표 1〉 부산교정시설 입지 관련 주요 사항

날짜	주요 추진 내용	비고
2007.04~2007.09	부산시와 법무부 간의 MOU 체결을 통한 강서구 화전동 이전 추진 부산시와 LH 간의 MOU 체결	지역 주민의 재산권 침해 상공계 기업들의 이미지 실추 염려
2012.12	부산시가 부산구치소를 명지국제신도시로 병설 이전 결정	LH의 명지국제신도시 건설 반대
2016.11	부산시가 강서구 엄궁동의 부산구치소 이전 방안 발표	엄궁동의 비상대책위원회 등으로 인해 무산
2019.08	부산시와 법무부 간의 MOU를 토대로 강서구 대저동 일원 통합이전 추진	강서구 의회 중심의 반대 성명서 발표 등으로 무산
2021.06~2022.12	부산교정시설 현대화 개발 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	통합 이전 및 지역별 이전 방안 제시
2023.05~2023.11	부산시에서 입지선정위원회 추진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강서구로 통합 이전하는 방안 권고	2024년 총선으로 인해 구체적인 추진 내용 미결

출처: 참고문헌을 검토하여 저자 정리.

2. 교정시설의 특성과 수용 요인에 대한 이론

본 연구에서 다루는 교정시설은 대표적인 비선호 시설(locally unwanted land uses, LULUs)로 인식되고 있다. 비선호 시설은 지역이나 국가에서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이 입지할 경우 소음, 위험성, 오염, 교통량 증가, 재산권 하락 등의 이유로 인해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거부하는 시설을 의미한다(Popper, 1985). 교정시설 역시 범죄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해당 시설이 입지하게 되는 지역 주민들은 반대하는 경향을 보인다(Martin & Myers, 2005).

국내에서 교정시설의 입지와 관련된 갈등은 교정시설이 건설되어 있던 주변 지역이 개발 및 도심화되면서 나타나는 것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 통상 법원 및 검찰청은 도심 내에 소재하고 있으며, 이들 기관이 소재하는 지역에 대부분 교정시설이 입지되어 있다(송영삼, 2016). 특히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용자를 위한 구치소의 경우, 재판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법원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정시설을 신축하거나 이전하는 경우는 대부분 교정시설들이 외곽에 설치되어 있다가 주변 지역이 개발되면서 교육 환경 및 외관상 등의 문제로 인해 입지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김민영 외, 2018).

비선호 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과 수용 수준은 입지 선정에 있어서 매우 핵심적이다(Martin & Myers, 2005). 통상 수용이란 개념은 특정 대상에 대한 외면적 행동과 내면적 가치 체계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Duncan, 1981). 이러한 측면에서 수용은 외면적 태도에 국한된 순응(compliance)보다, 내면적 태도와 변화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조경훈·정경락, 2020; Duncan, 1981). 교정시설을 비롯한 비선호 시설에 대한 수용 수준은 다양하게 측정될 수 있으나, 교정시설과 관련한 수용의 경우 지역 내에 설치 및 운영 중인 교정시설에 대한 긍정 인식 수준, 지역 내 교도소 시설을 증설 또는 확충하는 것에 대한 동의 수준, 지역 교도소를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수준 등으로 측정되어 왔다(이홍재, 2018).

비선호 시설의 입지 과정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주민들이 해당 시설을 수용하는 요인을 매우 다양하게 구성하고 있으며, 비선호 시설의 유형마다 수용 요인 역시 다르다고 알려져 있다(최화식, 2012). 그러나 미시적 수준에서 교정시설의 수용 여부는 개별 주민이 시설이 입지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잠재적 손해와 잠재적 효용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이홍재, 2018; Martin & Myers, 2005; Rogers, 1998).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감정 휴리스틱 모델(affect heuristic model)과 스키마 이론(schema theory)을 토대로 교정시설에 대한 수용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감정(affect)은 특정한 사람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자극에 대한 긍정적인 기분이나 부정적인 감정을 의미한다(Slovic et al., 2004). 아울러 휴리스틱(heuristic)은 판단이나 결정을 단순화하고 빠르게 낼 수 있는 규칙이나 방법을 의미한다(Tversky & Kahneman, 1974). 사람들은 리스크나 위험에 대해서 직관적인 "감정"으로 이해하기도 하지만, 리스크 평가를 합리적이면서도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분석"하기도 한다(Slovic & Peters, 2006). 특정한 상황에 대한 리스크를 판별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계산을 해야 하는 수고가 따른다. 이와 달리 감정에 의한 판단은 빠르고 직관적이며 쉽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감정에 의존하는 경향을 나타내며 이를 "감정 휴리스틱"이라고 부른다(Slovic et al., 2002: 322).

감정 휴리스틱 모델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다양한 종류의 위험과 리스크에 대한 인식과 수용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즉, 특정한 리스크에 대한 감정이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리스크에 대한 판단과 예상되는 효용 간에 중요한 연결 고리가 존재한다(Finucane et al., 2000). 예를 들어 교정시설, 원자력 시설 등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한다. 따라서 특정한 시설에 대한 감정은 인지된 리스크와 효용에 대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통상적으로 인지된 리스크와 효용은 서로 역의 관계(inverse relationship)에 있다고 가정한다(Alhakami & Slovic, 1994).

그러나 사람들은 감정만으로 모든 의사결정을 내리지 않는다. 감정 휴리스틱 모델은 의사결정을 위한 시간이 한정되거나, 판단과 감정이 불확실할 때 유용하다(Finucane et al., 2000). 만약 제한된 합리성을 가정하여 대안과 관련된 정보가 더 많이 주어진다면, 여러 대안 중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것이 인간의 내재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Trujillo, 2018). Rogers(1998)는 일종의 지식 구조로서(structure of knowledge)의 스키마 이론을 제안하며, 사람들마다 비선호시설에 대한 정보를 인지, 활용, 적용하는 과정이 달라 현상을 다르게 인식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비선호시설의 리스크와 효용 수준은 사람들이 지닌 스키마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비선호시설에 대한 감정과 개인의 인지 구조에 의한 의사결정은 배타적이라기보다는 상호보완적이라고 할 수 있다(Trujillo, 2018).

이에 본 연구는 감정 휴리스틱 모델과 스키마 이론을 적용하여 교정시설에 대한 인식과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다. 첫째, 교정시설과 관련된 리스크나 예상되는 손해는 수용 수준을 낮추는 것이 일반적이다(Rogers, 1998). 그러나 비선호 시설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와 손해가 수용이 불가능할 정도라면 NIMBY 현상으로 이어져 주민의 반대를 극복하기 어려울 수 있다(Flynn et al., 1993). 이와 달리 비선호 시설의 입지로 인한 잠재적 리스크와 손해가 어느 정도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잠재적 효용과 비교하여 비선호 시설에 대한 태도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Rogers, 1998). 환언하면, 개별 주민들은 비선호 시설에 대한 잠재적 리스크의 크기를 먼저 판단하여 리스크가 지나치게 높으면 수용 불가의

입장을 택하지만(1단계), 예상되는 리스크가 어느 정도 일반적인 수준이라면 잠재적 효용을 비교(2단계)하여 태도를 결정한다는 것이다(Sokolowska & Tyszka, 1995).

먼저 교정시설과 관련된 우려와 잠재적 손해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주민들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안전에 대한 두려움(Martin & Myers, 2005), 재산권 하락에 대한 걱정(McGeever, 2019; Martin & Myers, 2005), 거주 지역의 특성과 평판(Kilburn et al., 2014)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교정시설 주변의 주민들은 재소자들로 인한 범죄율 증가와 더불어 재소자들의 방문객들이 주변 지역에서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에 대한 염려를 느낄 수 있다. 또한 교정시설 주변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교정시설이 존재함으로써, 일종의 낙인 효과(stigma effect)가 발생하여 재산의 가치가 하락하는 한편 주민들이 지역 공동체를 위한 노력이나 사회적 자본이 저하될 것을 우려할 가능성이 존재한다(McGeever, 2019).

둘째, 비선호 시설이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의 수준은 사람들의 인지 과정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스키마 이론은 사람들의 특정한 정보나 인식 수준이 동일하지 않다고 가정한다(Graesser & Nakamura, 1982). 따라서 사람들이 정보를 인지하거나 새로운 정보를 적용할 때 학습과 경험에 근거하여 새로운 정보를 적절하게 취사선택할 수 있으며, 관찰된 정보에 기반하여 인과적 추론이 가능하다. 그러나 교정시설을 비롯한 비선호 시설에 대한 리스크와 잠재적 손해는 심리적인 요소에 기인하기 때문에(Rogers, 1998), 비선호 시설이 초래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전문가적 의견과 대중의 판단 간에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Slovic et al., 1981). 일반 대중이 판단하는 판단의 어림법은 비선호 시설과 관련된 리스크의 초깃값이 너무 낮거나, 너무 높은 경우 판단의 오류가 발생되기 쉽기 때문이다(Fischhoff et al., 1980).

따라서 교정시설과 가까이 살거나, 교정시설을 경험해 본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 간에는 교정시설에 대한 잠재적 리스크를 평가할 때 초깃값이 다를 수 있다. 일부 연구자들은 비선호시설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사람일수록 반대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존재하지만(Dear, 1992), 실제로 교정시설이 입지하였다는 이유로 지역의 범죄률이 급격하게 증가하거나 재산권의 하락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물리적인 거리와 교정시설에 대한 거부감이 뚜렷한 역의 관계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우리 나라를 비롯한 미국에서도 도심 지역 내 교정시설이 존재하지만, 주변 지역의 지가 또는 재산권의 하락이 가시적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교정시설 주변에 거주할수록 거부감이나 우려가 낮은 경우가 있다(McGeever, 2019).

셋째, 교정시설의 입지로 인한 잠재적인 효용은 교정시설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와 관련이 있다. 교정시설의 입지로 인한 지역의 사회에 대한 기여는 크게 경제적 효과와 사회 안전망 강화 효과라고 볼 수 있다. 먼저 교정시설의 경제적 기여에 관한 포괄적인 연구는 아직 미비하지만, 이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유병철, 2016). 무엇보다

교정시설에 방문하는 면회자와 자원 봉사자의 방문객 수가 많기 때문에 교정시설 주변의 상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수용자의 식사 및 생활용품 구입이 인근 지역 사회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교정시설이 입지하게 될 경우, 법무부에서 지역 주민에게 직접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지는 않지만 교정 시설과 관련된 도로망 및 기반 시설이 확충되며, 시설 외관과 주변 공간을 자연 친화적으로 조성함으로써 생활 여건이 개선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교정시설의 편의시설 예컨대 체육관, 테니스장, 어린이집, 놀이터 등의 시설을 교정시설 직원과 함께 사용하면서 지역주민들도 이용이 가능하다(김민영 외, 2018).

또한 교정시설과 관련된 경제적 효용 뿐만 아니라, 교정시설의 입지로 인해 오히려 지역 안전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는 장점 역시 존재한다(유병철, 2016). 교정시설이 입지할 경우 지역 사회 안전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인근지역 CCTV 설치 지원, 주거환경개선사업, 법질서 실천운동 선도지역의 선정 및 범죄예방설계를 통해 지역의 안전 수준이 오히려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김민영 외, 2018). 예컨대 여주보호관찰소와 원주보호관찰소에서는 경찰과 협력하여 인근지역 CCTV 설치 및 순찰 강화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체감 안전도를 강화하려는 높이기 위해 노력한 바 있다(손외철, 2015).

이처럼 교정시설이 부정적·긍정적 효과를 동시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교정시설에 대한 태도도 일관적이지 않다. 예컨대 1980년대 미국의 교정시설 붐이 일어남으로써 교외 지역(rural area)의 경제적 발전을 위해 NIMBY 현상에서 PIMFY(Please in My Front Yard)로 전환된 사례를 들 수 있다(Engel, 2007). 교정 시설들이 교외 지역으로 입지하게 되면, 줄어드는 제조업 일자리 문제 해결과 동시에 산업 구조 변환이 용이해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전남 남원시에서 지역 상권과 공공기관 유치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면서 교도소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시사저널, 2019). 더욱이 교정시설이 입지한 지역의 지가 및 주택 가격의 하락이 뚜렷하지 않다는 결론을 제시하는 연구가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McGeever, 2019), 교정시설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는 주민들의 수용도를 높일 수 있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상 감정 휴리스틱 및 스키마 이론에 기반하여 교정시설과 관련된 주민의 인식과 수용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과 측정 변수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교정시설에 대한 수용 여부에는 주로 개별 주민들이 교정시설에 주관적인 심리적인 요소들이 작용하며, 잠재적으로 예상되는 리스크 수준이 높아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사람들마다 경험과 인지구조가 달라 교정시설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지만, 교정시설에 대한 정보와 경험이 많을수록 거부감이 낮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교정시설 입지로 인한 지역 경제 및 생활 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잠재적 효용 수준을 높임으로써 교정시설의 수용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표 2〉 교정시설에 대한 인식 및 수용 수준의 영향 요인

요인	측정 변수	수용 수준	선행 연구
잠재적 손해	주택 가격 하락	-	이홍재(2018); 송영삼(2016); 심준섭(2009); McGeever(2019); Kilburn et al., 2014; Martin & Myers(2005); Flynn et al.(1992); Siegrist(2000)
	자녀 교육 부담		
	지역의 안전 수준 하락		
	범죄에 대한 두려움		
학습 및 경험	교정시설 주변 거주 경험	+	김민영 외(2018); 박은주·백진(2018); McGeever(2019); Engel(2007)
	교정시설 직접 경험		
잠재적 효용	지역 주민의 채용	+	박은주·백진(2018); 유병철, (2016); 한동섭·김형일(2011); 심준섭(2009); Tanaka(2004)
	복지 증진을 위한 편의시설		
	방문객 증가 등 지역 발전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출처: 참고문헌을 검토하여 저자 정리.

3. 선행연구 및 가설

본 연구는 교정시설에 대한 수용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주관적인 요소는 설문이나 인터뷰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교정시설에 대한 설문조사는 매우 한정적이기 때문에, 교정시설의 수용 이외에도 인식 수준과 교정시설의 입지 특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가설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교정시설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거나, 교정시설 입지 지역이라는 이미지, 재소자들로부터 잠재적인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부정적인 사고는 교정시설에 대한 수용 수준을 낮추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가 존재한다. 예컨대, 홍성열(2008)의 연구에서 198명의 대학생들에 대한 교도소의 이미지를 조사한 결과, 찬성하는 응답자는 15.7%인 반면, 반대하는 응답자는 84.2%로 압도적으로 거부하는 비중이 높았다. 자신의 거주 지역에 교도소가 입지하는 것을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자녀 교육, 집값 하락이 가장 큰 이유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도소에 대한 정서적 차원의 분석 결과 교도소를 연상하면 불안감이 다른 정서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응답자들이 범죄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최화식(2012)의 연구에서는 비선호시설을 혐오기피시설과 위험시설로 구분하고 각 시설에 입지한 주민 27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해당 연구에서 교도소는 위험시설로 분류되었으며, 위험시설을 기피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기술적 요인(주민 건강 위험, 설치 및 운영의 안정성 등)과 경제적 요인(재산가치 하락, 지역 발전 저해 등), 환경적 요인(지역

이미지, 지역 환경오염 등)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비슷하게 앞서 García et al.(2017)의 연구는 스페인의 교도소 건설과 관련된 주요 이해 관계자들(시장, 관료, 사업가 등)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인터뷰와 설문을 수행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도 일반 시민들은 교도소가 건설될 경우 더 많은 경비와 순찰이 이루어져 인지되는 안전감(perceived safety)이 증가할 수 있지만, 범죄자가 근처에 있다거나 폭동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감(sense of risk)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주요 관계자들 역시 교도소가 지역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이처럼 교정시설은 지역 이미지와 부동산 가치 하락 및 안전 수준에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수용 수준을 낮출 수 있다고 가정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한다.

가설 1. 교정시설로 인한 잠재적 손해가 높다고 인식할수록 교정시설 입지를 반대할 것이다.

둘째, 교정시설에 대한 인식 및 수용 수준에 관한 선행연구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교정시설 인근과 그 외 주민들을 나누어 설문 조사를 하는 경향이 존재한다. 이는 앞서 언급한 스키마 이론에 근거하여 교정 시설을 경험하거나, 교정 시설 근처에 거주한 주민들은 예상되는 잠재적 위험이나 리스크를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연구들의 가장 큰 특징은 교정시설 주변에 거주하거나, 교정시설 및 인근 시설을 경험할수록 교정시설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이 더 많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김민영 외(2018)의 연구는 서울에서 교정시설 인근 주변 주민과 일반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교정보호시설에 관한 인식과 찬성에 관한 설문 조사를 수행하였다. 해당 연구에서 교정보호시설을 직접 경험(직접 방문, 편의시설 이용, 가족 및 지인 근무)한 응답자들은 법조타운 건설에 찬성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또한 박은주·백진(2018)은 서울 남부교정시설의 사례를 들어 수용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제시하였다. 해당 교정시설의 특징적인 측면은 주변 고층아파트와의 친화적인 분위를 위해 감시대를 없애고 주벽을 최소화하는 한편, 녹지공간을 설계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직원용 체육관, 테니스장을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어린이집을 교정시설 직원 자녀와 지역 주민의 자녀가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면서 주민들이 교정시설에 대한 거부감이 완화되고 친숙하게 느끼게 되었다는 변화를 제시하였다. 특히 해당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이용 전에는 교정시설에 대해 부정적이었으나, 입학 이후에는 교정시설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바뀐 응답자의 비중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 문헌에서도 교정시설에 대한 호의 수준이 교정시설 인근 거주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ngel(2007)은 교정시설이 존재하는 6개 지역과 교정시설이 없는 2개 지역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교정시설이 존재하는 6개 지역에 거주

하는 주민의 대다수가 교정시설에 대해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교정시설에 대한 입지를 위한 공청회 참석 여부 역시 교정시설이 존재하는 지역 주민의 참여 의사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일수록 교정시설에 대한 관심이 높은 반면, 거부감은 더 낮다고 해석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상대적으로 교정시설과 지역 사회의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입지가 도시 외곽보다는 근린시설이 밀집한 지역이 바람직하다는 연구가 존재한다. Johnson(2006)은 재소자들이 근린지역 내에 거주하며 지역 사회와의 교류를 촉진하고, 재범 위험을 낮출 수 있도록 고안된 시설인 중간처우(community corrections center, 또는 halfway house)의 입지 선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근린지역의 특성과 장소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HP 및 다기준의사결정 모델을 적용한 분석 결과, 중간처우시설이 입지해 있는 지역은 주변 지역에 도서관, 체육시설, 병원 등과 같은 편의 시설이 주변에 많이 있으며, 도시 중심지와 가까운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는 교정시설에 대한 경험이나 교정시설과 지역 사회와의 교류가 교정시설에 대한 거부감이나 심리적 불안감을 낮추고 교정시설에 대한 수용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가설 2. 교정시설 경험이 있을수록 교정시설 입지를 찬성할 것이다.

셋째, 교정시설로 인해 고용 효과 등을 비롯한 지역 경제 발전 등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되거나 발생한다고 인식할수록 교정시설에 대한 선호도나 수용 수준이 높다는 선행연구가 다수 존재한다. 국내 연구에서 김도연(2011)은 대구광역시 하빈면 주민들 6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교도소가 이전될 경우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은 22명(34.9%)으로, 반대하는 의견 12명(19.0%)보다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지역 발전에 긍정적인 예측 수준이 교도소 입지에 대한 수용도 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도출하는 것은 어렵지만, 교도소 이전에 따른 지역 발전 효과를 주민들이 예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앞서 언급한 García et al.(2017)의 연구에서 주요 이해 관계자들은 교도소 설립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단일 응답이 33.09%로 가장 높았지만, 호의적 또는 매우 호의적이라는 응답을 종합하면 37.41%로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 결과는 고용 증가와 경제 개발 효과가 유발된다는 인식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교정시설로 인한 경제적 효과 이외에도 체감 안전 수준에 관한 긍정적인 효과도 존재한다. Martin(2000)은 Indiana County의 거주자들을 교도소와 가까운 지역(2마일 이내), 무작위 추출에 의한 주변의 거주 주민, 그 외 지역 주민 등 크게 세 가지 집단으로 나누어 인식 조사

를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세 집단을 통합하여 기술 통계를 수행한 결과 개인적 또는 가족의 안전에 대해서는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가 우려스럽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주민의 고용이나 경제적 상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인식이 응답자의 50-6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Young(1998)의 연구 역시 British Columbia의 교정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147명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122명(약 83%)은 교정시설로 인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없거나 오히려 더 안전하다고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교정시설의 입지로 주변 지역의 안전 및 보안 시설을 좀 더 강화하였기 때문에 주민들이 안전함을 느낄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교정시설 입지에 따른 고용 효과, 유동 인구 증가로 인한 경제 발전 및 기타 지역 개발 등의 잠재적 효용이 높을수록 교정시설에 대한 수용 수준이 높다고 예상할 수 있다.

가설 3. 교정시설로 인한 잠재적 효용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교정시설 입지를 찬성할 것이다.

이 외에도 선행연구에서는 교정시설에 대한 수용 수준은 나이, 성별, 교육 수준, 거주지역, 거주기간, 소득, 자가보유, 혼인 여부 여부 등과 같은 변수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민영 외, 2018; Martin, 2000). 이는 비선호시설에 대한 설문에 참여한 자체가 해당 변수와도 많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Dear, 1992).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에서도 분석 결과마다 차이가 존재하지만, 통상 비선호시설일 경우 여성일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선호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조경훈·정경락, 2020; 김민영 외, 2018).

Ⅲ. 연구 설계

1. 분석 대상 및 자료의 측정

1) 분석 대상

본 연구는 교정 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도와 수용 요인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부산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추진한 설문 결과를 활용하였다. 입지선정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의 16개 구·군에 거주 중인 만18세 이상의 시민을 대상으로 교정시설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해당 위원회에서는 설문 조사의 표본을 2,000명으로 설정하고, 교정 시설이 입지되어 있는 강서구(600명)와 사상구(600명)[6]에 거주하는 주민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따라서 강서구와 사상구를 제외한 나머지 14개 구·군에는 총 8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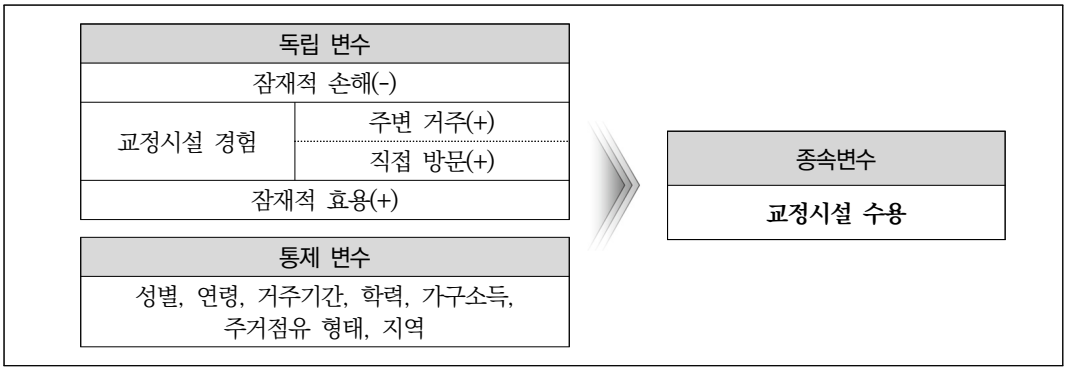
의 의견이 조사되었다. 14개 구·군의 인원 수는 부산광역시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각 구와 군의 인구 비율을 반영하여 배분하였다([부록 1] 참고). 설문 조사는 비확률표집 방법인 할당 추출법을 활용하여 성별과 연령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대표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2023년 9월 12일부터 10월 20일까지 전문 리서치 기관이 1:1 대면 면접을 통해 수행하였다.

2) 분석의 틀 및 변수의 측정

〈그림 1〉은 본 연구의 분석 틀로서 응답자들의 교정시설 수용도에 미치는 영향을 시각화한 것이다. 종속 변수로서 교정시설에 대한 수용 수준은 "교정시설이 거주지 주변에 입지한다면, 귀하께서는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 측정하였다(이홍재, 2018).

또한 교정시설에 대한 수용 요인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독립 변수 즉, 잠재적 손해(이홍재, 2018; 송영삼, 2016; 심준섭, 2009; McGeever, 2019; Kilburn et al., 2014; Martin & Myers, 2005; Siegrist, 2000, 교정시설 경험(김민영 외, 2018; 박은주·백진, 2018; McGeever, 2019; Engel, 2007), 잠재적 효용(박은주·백진, 2018; 유병철, 2016; 한동섭·김형일, 2011; 심준섭, 2009; Tanaka, 2004)을 설정하였다. 선행 연구를 토대로 작성된 〈표 2〉를 참고하여 교정시설에 대한 잠재적 손해와 잠재적 효용을 각각 3문항으로 구성하고, "현대화된 교정시설이 입지할 경우 각 진술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답해주십시오" 라는 질문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교정시설 경험 여부는 시설의 주변에서 거주 여부와 직접 방문 여부를 측정하는 이분형 더미로 처리하였다.

〈그림 1〉 연구의 분석 틀



6) 교정시설에 대한 권고안은 존재하지만, 아직까지 강서구와 사상구의 교정시설 이전에 대한 공식적인 추진 계획이 발표되지 않아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서 강서구와 사상구의 실명 대신 알파벳으로 대체한다.

독립 변수 이외에도 선행연구를 토대로 성별, 연령, 거주기간, 학력, 가구 소득, 주거 검주 형태, 거주 지역에 대한 변수를 고려하여 분석에 포함하였다(김민영 외, 2018; Martin & Myers, 2005). 변수의 구체적인 측정 방법은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 변수의 측정

구분	변수	문항		측정 방법
종속 변수	교정시설 수용	거주지에 현대화된 교정시설이 입지할 경우 수용 수준		1=매우 반대, 2=반대, 3=보통, 4=찬성, 5= 매우 찬성
독립 변수	잠재적 손해	주민불안을 초래할 것이다		1=전혀 그렇지 않음, 2=대체로 그렇지 않음, 3=보통 4=그러함, 5=매우 그러함
		지역의 이미지가 나빠질 것이다		
		지역의 자산가치가 떨어질 것이다		
	교정시설 경험	교정시설 주변 거주 여부		1=거주 경험 있음, 0=없음
		교정시설 방문 여부		1=방문 경험 있음, 0=없음
	잠재적 효용	접근성, 주변환경 개선, 공원, 도로 등이 잘 정비될 것이다		1=전혀 그렇지 않음, 2=대체로 그렇지 않음, 3=보통 4=그러함, 5=매우 그러함
		유동인구 증가로 상권이 활발해질 것이다		
		주민안전이 더 좋아질 것이다		
통제 변수	성별	남성=1, 여성=0		
	연령	20대=1, 30대=2, 40대=3, 50대=4, 60대 이상=5		
	거주기간	1년 미만=1, 1-3년 미만=2, 3-5년 미만=3, 5-10년 미만=4, 10년 이상=5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1, 고등학교 졸업=2, 대학교 졸업=3, 대학원 재학이상=4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1, 200-300만 원 미만=2, 300-400만 원 미만=3, 400-500만 원 미만=4, 500만 원 이상=5		
	주거점유	자가 보유=1, 그 외=0		
	소재 지역	A구	A구=1, 그 외=0	
		B구	B구=1, 그 외=0	
		일반 시민	A구와 B구 비거주 시민=1, A구와 B구 주민=0	

2.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종속 변수는 현대화된 교정시설에 대한 수용도를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교정시설에 대한 수용도의 영향 요인을 알아보고자 서열형으로 측정했기 때문에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 분석(ordere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으로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점 리커트 척도가 종속 변수인 경우 OLS를 사용할 수 있으나, OLS 회귀의 여러 가정들을

위배하고 있어 분석 결과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Peel et al., 199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순서형 로지스틱을 고려하였으나, 해당 분석에서는 회귀 계수 값이 종속 변수의 각 범주에서 동일하다라고 가정하는 평행선 가정(parallel lines assumption)에 대한 검정이 필요하다. 만약 종속 변수의 각 범주의 관측 대상에서 평행선 가정이 위반되는 경우에는 일반화된 순서형 로지스틱 분석(generalized ordere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수행해야 한다(Ari & Yildiz, 2014).

본 연구에서는 STATA 15.0의 순서형 로지스틱의 부가명령어인 brant 분석 결과, 귀무가설이 기각되어 평행선 가정에 기초한 순서형 로지스틱 분석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χ^2=128.23, p=0.000)[7]. 이에 일반화된 순서형 로지스틱 분석을 활용하였으며, 모든 변수의 회귀계수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부가명령어인 autofit을 활용하여 설명변수별로 범주별 회귀계수를 추정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의 주요 독립 변수인 잠재적 손해와 잠재적 효용은 각각 3문항으로 측정하였으나, 각 변수의 하위 문항들 간의 상관관계가 높아 탐색적 요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들이 요인 분석을 수행하기에 적절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KMO와 Bartlett 구형성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요인들의 신뢰도는 Cronbach's α값을 통해 검정하였다. 요인 분석 실시 이후에는 추출된 요인 및 다른 변수들 간의 상관 관계를 제시하였다.

일반화된 순서형 로지스틱 분석은 STATA 15.0 버전을 사용하였으며, 기술통계 및 요인분석 등은 R 4.2.0 버전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Ⅳ. 분석 결과

1. 기초 통계 및 그룹 간 수용 차이 분석

1) 응답자 특성 및 주요 통계

다음 〈표 4〉는 응답자의 특성에 대한 기초 통계량이다. 성별의 경우 남성이 996명(49.8%), 여성이 1,004명(50.2%)으로 여성의 비중이 다소 높은 편이다. 연령대는 대부분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나 50대가 420명(21.0%)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의

[7] 거주지 주변에 교정 시설에 대한 수용 수준의 변수에서 방문 경험(χ^2=8.15, p=0.043), 잠재적 손해(χ^2=21.17, p=0.000), 나이(χ^2=26.19, p=0.000), A구(χ^2=14.77, p=0.002)에서 평행선 가정이 위반되었다.

경우 대학교 졸업자가 1,017명(50.9%)으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주거 거주 점유 형태는 자가 보유자가 1,348명(67.4%)으로 응답자의 약 2/3를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거주지의 경우 설문조사 수행 당시 교정시설이 있는 지역의 응답자가 각각 600명(30.0%)씩 응답하였으며, 그 외 지역 거주 시민이 800명(40.0%) 참여하였다. 또한 현재 거주지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응답자는 1,037명(51.9%)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월 가구 소득은 응답별로 비슷한 비중을 나타내고 있으나 500만 원 이상이 405명(20.3%)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교정 시설 주변 거주 경험 및 방문 여부를 살펴보면 교정시설 주변에 거주한 경험이나 방문한 비율은 각각 10.5%, 18.6%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5점 리커트 응답으로 측정된 수용 수준에 대한 응답의 경우, 2,000명 가운데 반대 의견이 610명(30.5%)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보통이 605명(30.3%), 찬성 350명(17.5%) 순으로 나타났다. '매우 반대'와 '반대' 의견은 950명(60.6%)으로 '보통'이나 '찬성', '매우 찬성'보다는 응답 비중이 높아 교정시설에 대한 선호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표 4〉 응답자 특성 및 주요 통계(N=2,000)

변수	구분	빈도(비율)	변수	구분	빈도(비율)
성별	남성	996(49.8%)	거주지	A구	600(30.0%)
	여성	1,004(50.2%)		B구	600(30.0%)
				그 외	800(40.0%)
연령	20대	378(18.9%)	거주 기간	1년 미만	112(5.6%)
	30대	377(18.9%)		1~3년 미만	190(9.5%)
	40대	408(20.4%)		3~5년 미만	254(12.7%)
	50대	420(21.0%)		5~10년 미만	407(20.4%)
	60대 이상	417(20.9%)		10년 이상	1,037(51.9%)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108(5.4%)	월 가구 소득	200만 원 미만	433(21.6%)
	고등학교 졸업	782(39.1%)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407(20.4%)
	대학교 졸업	1,017(50.9%)			
	대학원 재학 이상	92(4.6%)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	388(19.4%)
주거 점유	자가	1,348(67.4%)			
	그 외	652(32.6%)		4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	367(18.4%)
				500만 원 이상	405(20.3%)
주변 거주 여부	예	211(10.5%)	수용 수준	매우 반대	330(16.5%)
	아니오	1,789(89.5%)		반대	610(30.5%)
방문 여부	예	372(18.6%)		보통	605(30.3%)
	아니오	1,628(81.4%)		찬성	350(17.5%)
				매우 찬성	105(5.2%)

2. 요인 분석 및 변수 간 관계 분석

1) 교정시설에 대한 탐색적 요인 분석

〈표 5〉는 잠재적 효용과 잠재적 손해에 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이다. Varimax 회전 방식을 사용하여 요인 분석을 수행한 결과 잠재적 효용 및 손해에 관한 설문 문항으로부터 총 2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KMO 값은 0.76로 분석되었으며, Barlette 구형성 검정의 확률값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p<0.001$), 요인 분석에 활용된 자료가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모든 변수의 요인 적재량은 모두 0.6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공통성 값 역시 0.7 이상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변수들 간의 내적 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Cronbach's alpha값을 검정한 결과 잠재적 손해의 경우 0.858, 잠재적 효용의 경우 0.847로 도출되어 신뢰도가 적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5〉 변수의 탐색적 요인 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

요인	문항	요인적재량	공통성	신뢰도
잠재적 손해	주민 불안 초래	0.660	0.681	0.858
	부정적인 지역 이미지	0.877	0.832	
	지역 자산가치	0.861	0.824	
잠재적 효용	접근성과 주변 환경 개선	0.845	0.809	0.847
	유동인구 증가	0.858	0.817	
	주민 안전 증대	0.667	0.6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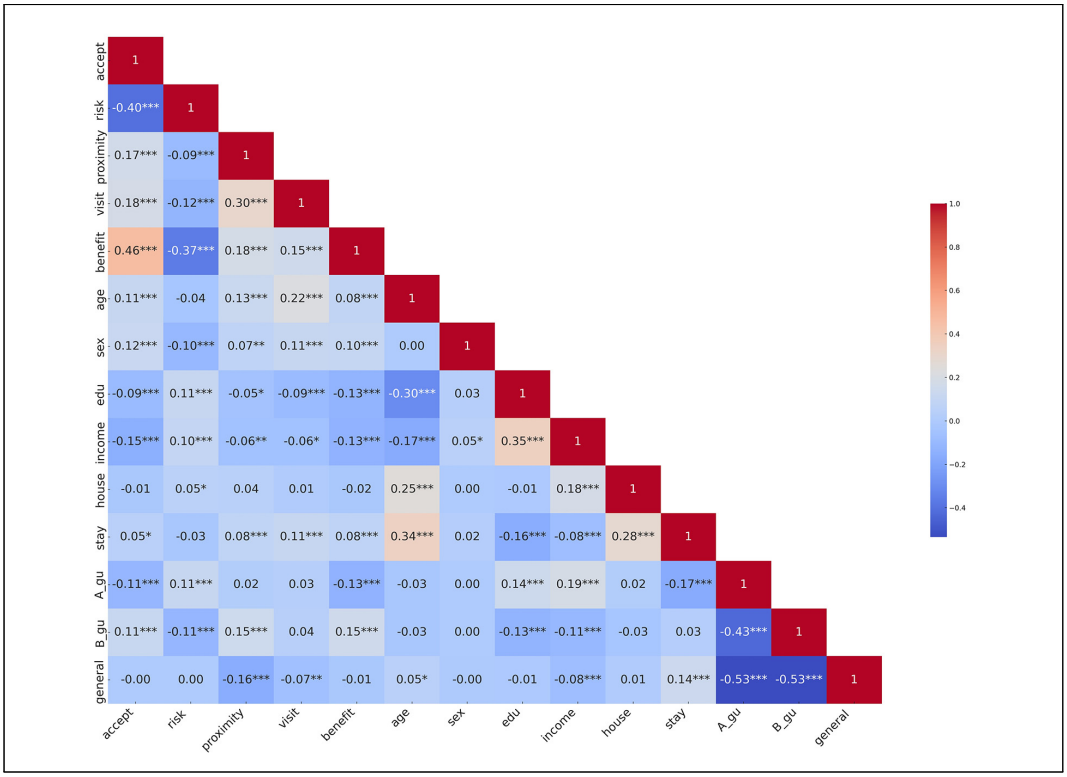
2)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그림 2〉는 변수 간 상관관계와 변수의 분포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수용 수준(accept)과 긍정적인 상관관계에 있는 변수는 교정시설 주변 거주 여부(proximity), 방문 여부(visit), 잠재적 효용(benefit), 나이(age), 남성(sex), 거주 기간(stay), B구 거주자 등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잠재적 효용은 가장 높은 긍정적인 상관계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0.46). 이와 달리 잠재적 손해(risk)와 교육(edu), 소득(income), 자가 보유(house), A구 거주자는 수용 수준과 부정적인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적 손해 역시 부정적 상관관계에 있는 변수 가운데 가장 계수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0.40).

주요 독립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교정시설 주변에 거주 여부와 방문 여부가 서로 긍정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0.30). 아울러 잠재적 손해와 잠재적 효용 간에는 부정적

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0.37). 특히 잠재적 손해는 다른 독립 변수들과 모두 부정적인 관계에 있는 반면, 잠재적 효용은 잠재적 손해를 제외하고는 모두 긍정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그 밖의 통제 변수를 살펴보면 상관 계수가 두드러지게 높은 관계는 관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변수 간 다중공선성의 우려는 높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2〉 변수 간의 상관 관계 및 변수별 분포



참고: *p<.05, **p<.01, ***p<.001

3. 교정시설의 수용도 분석 결과

〈표 6〉은 순서형 로지스틱과 일반화된 순서형 로지스틱 분석 결과를 오즈비(odds ratio)로 나타낸 결과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평행선 가정이 위배되어 순서형 로지스틱 분석보다는 일반화된 순서형 로지스틱 분석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순서형 로지스틱 분석 결과와 비교하여 일반화된 순서형 로지스틱을 적용하게 되면, 각 범주 간의 로지스틱 회귀 계수가 동일하다는 가정을 완화함으로써 각 범주에 대해 다른 회귀계수를 허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

라, 순서형 로지스틱에 비해 각 범주 간의 결과에 대해 더 상세하고 구체적인 분석 결과를 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순서형 로지스틱 분석 결과와 일반화된 순서형 로지스틱 분석 결과를 함께 제시하도록 한다.

일반화된 순서형 로지스틱 결과의 첫 번째 열은 매우 반대에 대비하여 반대, 보통, 찬성, 매우 찬성의 오즈비를 나타내며, 두 번째 열은 매우 반대, 반대에 대비하여 보통, 찬성, 매우 찬성의 오즈비를 의미한다. 세 번째 열은 매우 반대, 반대, 보통에 대비하여 찬성과 매우 찬성을 가리키며, 마지막 열은 매우 반대, 반대, 보통, 찬성 대비 찬성에 대한 오즈비를 나타내고 있다. 만약 교정시설에 매우 반대하는 집단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일반화된 순서형 로지스틱의 첫 번째 열을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한 반면,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집단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경우 마지막 열의 분석 결과가 유용할 수 있다.

먼저 본 연구의 첫 번째 가설인 잠재적 손해가 미치는 영향력은 교정시설에 대한 수용 수준의 범주별로 다르게 나타나지만,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채택되었다. 그러나 잠재적 손해적 손해의 부정적인 영향력은 교정시설에 대한 수용도가 더 낮을수록 오즈비가 더 낮아져, 그만큼 수용수준이 낮아질 확률이 더 높다고 할 수 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순서형 로지스틱에서는 잠재적 손해가 1단위 증가할수록 수용 수준이 0.508배 낮아지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따라서 일반화된 순서형 로지스틱의 결괏값이 순서형 로지스틱 분석 결과에 비해 범주별로 보다 정확한 추정치를 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두 추정치 모두 잠재적 손해가 높아질수록 수용도가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교정 시설이 가지고 올 수 있는 범죄 및 사회적 문제, 지가와 재산권 문제, 지역 이미지 악화 등에 대한 우려가 수용 수준을 낮출 수 있다는 선행연구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최화식, 2012; 홍성열, 2007; García et al., 2017).

한편 두 번째 가설로서 교정시설의 경험이 수용 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교정시설 주변 거주 및 방문 여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교정 시설 주변에 거주할 경우에는 거주하지 않는 응답자에 비해 교정시설에 대한 수용도가 1.47배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범주 간에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순서형 로지스틱 분석 결과 역시 주변에 거주하는 응답자는 교정시설을 수용할 확률이 1.46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분석 결과는 교정시설 주변에서 거주할 경우 교정시설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증가했다는 선행연구와도 일치한다(김민영 외, 2018; 박은주·백진, 2018).

이와 달리 방문 여부는 범주별로 다르게 나타났으며, 매우 흥미로운 분석 결과가 도출되었다. 일반화된 순서형 로지스틱 추정값에 따르면 방문 경험이 존재하는 사람은 수용시설을 매우 반대할 확률과 매우 찬성할 확률에는 서로 반대의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방문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매우 반대, 반대에 비해 보통, 찬성, 매우 찬

성할 확률이 1.710배 높고, 찬성 또는 매우 찬성할 확률이 1.5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매우 반대하거나 매우 찬성하는 주민들은 방문 여부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방문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찬성할 확률이 1.474배 높다고 분석된 순서형 로지스틱 분석의 추정치와도 비교했을 때 범주별로 방문 여부에 따른 분석 결과가 보다 정확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설 2는 교정시설 주변의 거주 여부만 수용 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부분 채택하고자 한다.

〈표 6〉 순서형 로지스틱 및 일반화된 순서형 로지스틱 분석 결과(Odds ratio)

변수	순서형 로지스틱	일반화된 순서형 로지스틱			
		[1] SD vs D, N, A, SA	[2] SD, D vs N, A, SA	[3] SD, D, N vs A, SA	[4] SD, D, N, A vs SA
잠재적 손해	0.508*** [0.458-0.562]	0.427*** [0.356-0.512]	0.459*** [0.402-0.524]	0.598*** [0.521-0.685]	0.666*** [0.538-0.823]
주변거주 (거주=1)	1.462* [1.095-1.952]	1.417* [1.061-1.892]	1.417* [1.061-1.892]	1.417* [1.061-1.892]	1.417* [1.061-1.892]
방문여부 (방문=1)	1.474** [1.173-1.851]	0.969 [0.663-1.415]	1.710*** [1.290-2.265]	1.523** [1.148-2.019]	1.280 [0.811-2.018]
잠재적 이익	2.220*** [2.008-2.452]	2.174*** [1.966-2.404]	2.174*** [1.966-2.403]	2.174*** [1.966-2.403]	2.174*** [1.966-2.403]
나이	1.068* [1.000-1.140]	0.946 [0.848-1.056]	1.004 [0.928-1.086]	1.198*** [1.096-1.308]	1.547*** [1.286-1.859]
성별 (남성=1)	1.274** [1.081-1.501]	1.279** [1.084-1.509]	1.279** [1.083-1.509]	1.279** [1.083-1.509]	1.279** [0.663-1.415]
교육	1.103 [0.964-1.261]	1.123 [0.905-1.393]	1.269** [1.078-1.492]	0.940 [0.783-1.127]	0.938 [0.689-1.276]
소득	0.899** [0.844-0.957]	0.905** [0.849-0.965]	0.905** [0.849-0.964]	0.905** [0.849-0.964]	0.905** [0.849-0.964]
자가	1.064 [0.882-1.284]	1.044 [0.864-1.262]	1.044 [0.864-1.262]	1.044 [0.864-1.262]	1.044 [0.864-1.262]
거주기간	0.964 [0.896-1.035]	0.963 [0.895-1.036]	0.963 [0.895-1.036]	0.963 [0.895-1.036]	0.963 [0.895-1.036]
A구	0.832 [0.679-1.019]	0.518*** [0.379-0.707]	0.942 [0.737-1.204]	1.039 [0.775-1.391]	0.824 [0.472-1.435]
B구	1.072 [0.878-1.309]	0.736 [0.518-1.043]	1.201 [0.944-1.528]	1.076 [0.819-1.413]	1.172 [0.715-1.920]
LR검정량	768.48***	721.04***			
관측치	2,000	2,000			

참고: *p<.05, **p<.01, ***p<.001; 괄호 안의 값은 95% 신뢰 수준을 의미; SD(strongly disagree)는 매우 반대, D(disagree)는 반대, N(neutral)은 보통, A(agree)는 찬성, SA(strongly agree)는 매우 찬성을 의미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세 번째 가설은 잠재적 이익과 교정시설의 수용도 간의 긍정적인 관계이다. 분석 결과 잠재적 이익의 증가는 모든 범주에 대해 오즈를 공통적으로 2.174배 높이며, 다른 모든 변수에 비해 가장 긍정적이면서도 높은 오즈비를 나타내고 있다. 순서형 로지스틱 분석 결과에서도 오즈비가 2.220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모든 변수에 비해 가장 높은 오즈비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다른 요인들에 비해 교정시설이 입지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고용 효과, 경제발전 및 지역 개발 등에 대한 잠재적 효용이 수용수준을 가장 높일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잠재적 효용과 교정시설의 수용 수준 간의 긍정적인 관계는 선행연구와도 일치하며(García et al., 2017; Martin, 2000), 분석 결과를 토대로 세 번째 가설을 채택한다.

그 외에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살펴보면, 나이의 경우 매우 반대, 반대, 보통 대비 찬성 또는 매우 찬성할 확률은 연령대가 증가하면서 1.198배 높아지고, 나머지 범주 대비 매우 찬성할 확률은 1.547배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순서형 로지스틱의 경우에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수용도가 높아질 확률이 1.068배 높아진다고 분석되었으나, 일반화된 순서형 로지스틱 분석 결과는 범주별로 통계적 유의성과 방향이 다른 것으로 제시되었다. 아울러 남성일수록 수용도가 1.279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범주 간의 영향력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분석 결과는 교정시설에 대해 남성이 상대적으로 수용 수준이 높다는 선행 연구와도 관련이 있다(김민영 외, 2018). 교육 수준의 경우 순서형 로지스틱의 경우 긍정적이지만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반화된 순서형 로지스틱 분석 결과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매우 반대 또는 반대 대비 보통, 찬성, 매우 찬성할 확률이 1.269배 높아졌지만, 그 외의 범주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이 높아질수록 수용도가 낮아질 확률이 0.905배로 나타났으며 모든 범주에서 같은 영향력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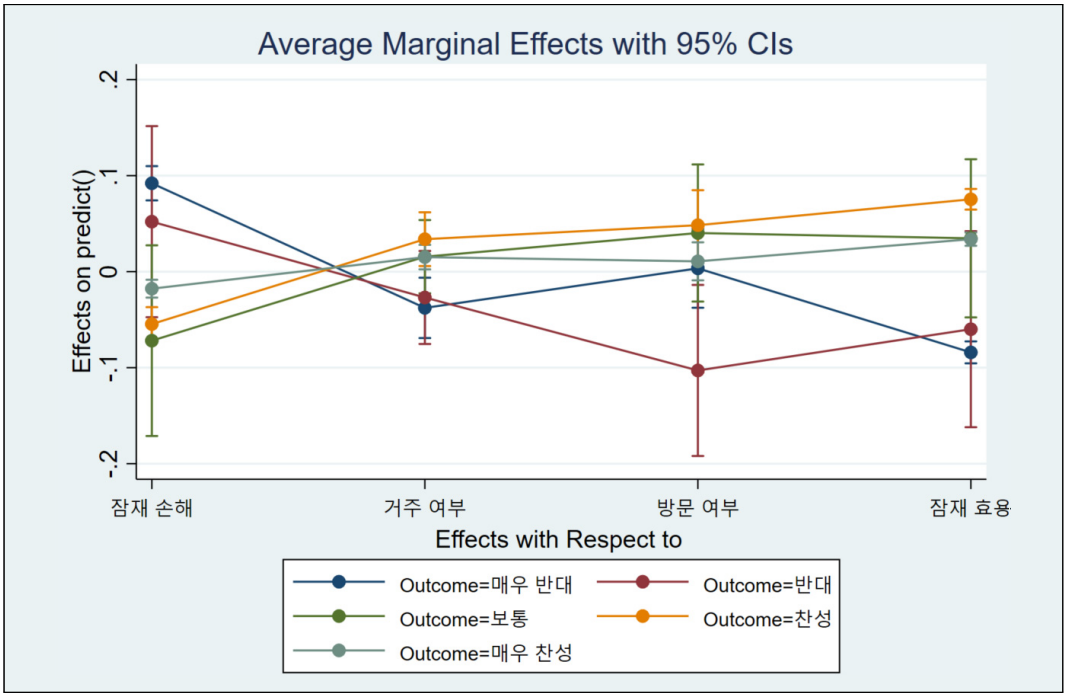
거주 및 거주지의 특성과 관련된 변수들은 모두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일반 시민 대비 A구에 거주하는 주민일수록 매우 반대 대비 반대, 보통, 찬성, 매우 찬성할 확률이 0.518배로 분석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반 시민 대비 A구에 거주할수록 교정시설을 매우 반대할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B구와 일반 시민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7〉 일반화된 순형 로지스틱 분석의 주요 변수 한계 효과

변수	Prob. (Y=매우 반대)	Prob.(Y=반대)	Prob.(Y=보통)	Prob.(Y=찬성)	Prob. (Y=매우 찬성)
잠재적 손해	0.079***	0.113	-0.117	-0.062***	-0.009***
거주	-0.323*	-0.537	0.035	0.042*	0.008*
방문	0.003	-0.136	0.071	0.055**	0.006
잠재적 효용	-0.073***	-0.119	0.079	0.094***	0.019***

〈표 7〉과 〈그림 3〉은 본 연구의 주요 독립 변수에 대한 수용 수준에 대한 한계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잠재적 손해가 높아질수록 반대할 확률은 7.9% 증가하는 반면, 찬성할 확률은 6.2% 줄어들고 매우 찬성할 확률은 0.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거주 경험이 존재하는 경우 매우 반대할 확률은 32.3% 감소하는 반면 찬성할 확률과 매우 찬성할 확률은 각각 4.2%, 0.8%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 경험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찬성할 확률만 5.5%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잠재적 효용이 증가할수록 매우 반대할 확률은 7.3% 감소하는 반면, 찬성할 확률과 매우 찬성할 확률은 각각 9.4%, 1.9%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주요 독립변수의 한계 효과



일반화된 로지스틱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교정시설 입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손해가 높다고 생각할수록 교정시설에 대한 수용도는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낸다. 교정시설 주변에서 거주했던 경험은 모든 범주에서 수용 수준을 높이는 반면, 방문 여부는 매우 반대하거나 매우 찬성하는 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잠재적 효용은 모든 범주에서 수용 수준을 가장 높일 수 있는 변수로 제시되었다. 그 외에 통제 변수에서는 여성보다는 남성이 교정시설에 대한 수용도가 높고,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수용도가 낮은 것으로 도출되었다. 또한 자가소유 여부 및 거주 기간은 교정시설 입지에 대한 수용 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일반 시민 대비 A구 거주 주민일수록 교정시설에 매우 반대하는 경향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본 연구는 교정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 그 외 지역의 주민들에 대해 교정시설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현대화된 교정시설의 입지 선정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일반화된 순서형 로지스틱 분석 결과 주요 독립 변인 가운데, 예상되는 잠재적 손해가 높아질수록 수용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와 비슷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아울러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한 경험보다는 주변 지역 거주 여부가 모든 범주 내에서 수용 수준을 1.417배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예상되는 잠재적 효용 역시 모든 범주 내에서 수용 수준을 2.174배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모든 변수 가운데 가장 높은 오즈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을 기준으로 전체 교정시설 가운데 30년 이상 경과된 교정시설이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향후 교정시설의 신축 및 확장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본 연구의 결과가 유용한 사례로 활용될 수 있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부산의 교정시설과 관련된 갈등이 2007년부터 오랜 기간 지속되었다는 점에서, 강서구와 사상구에 입지한 교정시설의 효과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 분석을 통해 객관적인 손해와 효용을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정시설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잠재적 손해, 예컨대 지가 및 부동산 가격 하락과 관련된 객관적 정보와 변화 등은 교정시설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최소화할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정보들은 교정시설 입지에 매우 반대하거나 반대하는 주민들 위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서는 잠재적 손해가 특히 매우 반대 또는 반대할 확률을 더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정시설에 대한 부정적 감정으로 인해 교정시설에 대한 리스크를 더 높게 판단할 확률이 높다. 그러므로 교정시설 입지 이후 주변 지역의 토지

가격, 범죄발생률 및 유동 인구에 대한 자료를 시계열로 구성하여 교정시설로 인한 부정적 효과의 발생 여부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교정시설에 대한 NIMBY 현상은 반드시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아닐 수 있다는 점에서 교정시설 입지에 반대하는 단체 및 집단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관심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교정시설 주변에서 거주하는 주민일수록 오히려 교정시설에 대한 수용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정시설을 방문한 경우보다 주변 지역에서 거주한 응답자일수록 모든 범주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되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교정시설과의 거주 거리가 가까울수록 거부하기보다는 수용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스키마 이론을 통해 교정시설에 대한 경험이 교정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낮춰 수용 수준이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더욱이 현대화된 교정시설의 경우 주변 지역의 주민들이 운동시설, 어린이집 등과 같은 편의시설을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교정시설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교정시설의 입지 선정과 관련하여 법무부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에서 잠재적 효용을 보다 구체화 또는 가시화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서 잠재적 효용은 변수들 가운데 가장 긍정적으로 모든 범주의 응답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지역에서 교정시설 입지와 갈등이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된 이유 중 하나는 입지 예정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 수렴 및 보상 또는 효용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무부에서는 교정시설 입지에 따른 별도의 보상이나 인센티브 제공이 어렵지만, 현대화된 교정시설이 입지할 경우에 주변 지역 위주의 물품 우선 구매, 생활 및 복지시설 공동이용 등을 통해 생활 환경 개선 및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 등에 대한 구체적인 효용 제시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주민들로 하여금 교정시설이 비선호시설이라기보다는 지역 공동체와 협력할 수 있는 사회적 시설로 인식될 수 있는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상 본 연구의 사시점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존재한다. 첫째, 본 연구는 교정시설과 관련된 갈등이 오랜 동안 지속되었던 부산 지역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분석 결과를 교정시설이 입지한 다른 지역의 이전 및 신축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비록 감정 휴리스틱 관점에서 교정시설에 대한 부정적 또는 긍정적 감정이 수용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부산 지역은 오랜 기간 동안 교정시설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다는 점에서 부정적 감정이 더 지배적일 가능성이 높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교정시설에 수용 요인에 대해서 설문 응답을 토대로 분석하였으나, 향후 강서 또는 사상구의 지역 주민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교정시설에 대한 수용 요인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수용 시설 주변 거주 경험 뿐만 아니라 거주 기간 및 방문 횟수 등에 대한 질문 문항을 다양하게 구성 및 측정하여 분석을 보다 포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문헌】

권지혜. (2022). 중간처우시설 활성화 방안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거주형 사회복귀센터 (RRC) 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25(1): 241-275.

김광구·이선우. (2013). 조정기제를 통한 안양교도소 관련 갈등해소 연구. 「교정연구」, 59: 61-101.

김도연. (2011). 비선호시설 정책수용정에 관한 연구: 대구교도소 이전을 중심으로. 「한국균형발전연구」, 2(1): 65-93.

김지수·심준섭·윤태섭. (2016). 비선호 시설 입지지역의 지역 특성 분석. 「한국지방행정학보」, 13(3): 51-71.

김영곤. (2012). 안양교도소 이전 갈등사례. 「공존협력연구」, 1(1): 223-230.

김민영·배상균·박경규. (2018). 「교정보호시설의 입지갈등과 대응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신문. (2022). 칼잠자는 수형자…시·법무부는 시설 이전 하세월. https://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221211.99099003190. (검색일: 2024.01.11.)

박은주·백진. (2018). 주민편의시설 수용을 통한 교정시설 입지 갈등 해결에 관한 연구: 서울남부교정시설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도시설계학회지 도시설계」, 19(6): 53-64.

법률신문. (2023). 교정시설 과밀화.. 수용률 117% 달해. https://www.lawtimes.co.kr/news/193099. (검색일: 2023.12.30.).

법무부. (2023). 「2023 교정통계연보」. 경기: 법무부.

부산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 (2023). 「부산교정시설 현대화를 위한 공론화 백서」.

부산일보. (2013). LH "부산구치소 명지국제신도시 이전 안 된다".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30604000080. (검색일: 2024.01.03.).

부산일보. (2019). [부산구치소·교도소 통합 이전] MOU 체결 배경과 전망.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90619000179. (검색일: 2024.01.03.).

손외철. (2015). 보호관찰소 이전에 대한 갈등원인과 해소방안. 「보호관찰」, 15(2): 43-84.

송영삼. (2014). 도심지 소재 교정시설의 이전사례 분석. 「교정연구」, 63: 175-203.

송영삼. (2016). 교정시설의 신축·이전과 지역사회 상생방안. 「교정연구」, 26(3): 105-128.

시사저널. (2019). 교도소가 혐오시설, 이젠 옛말… 남원시, 유치 추진.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93449. (검색일: 2024.01.04.).

안성훈. (2017). 교정시설 과밀수용의 문제점과 해소방안. 「교정연구」, 27(1): 55-93.

이홍재. (2018). 교도소 인근 지역주민의 지각된 위험과 편익이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교도소 신뢰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학보」, 15(1): 87-106.

연합뉴스. (2017). 전국서 가장 낙후된 부산구치소 이전 주민반발에 난항. https://www.yna.co.

kr/view/AKR20170216162100051 (검색일: 2024.01.03.),
유병철. (2016). 지역사회의 교정시설 기피현상과 극복방안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26(3): 81-103.
조경훈·정경락. (2020). 비선호시설의 수용성에 대한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 연구: 복지패널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행정」, 30(3): 29-52.
중앙일보. (2007). 부산교도소·구치소 통합이전 삐걱. https://www.joongang.co.kr/article/2894689#home. (검색일: 2024.01.03.).
최화식. (2012). 비선호시설의 유형별 입지갈등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도시행정학보」, 25(4): 123-151.
홍성열. (2007). 수형자의 교도소 생활에 대한 적응. 「교정연구」, 35: 99-115.
홍성열. (2008). 교도소 이미지. 「교정연구」, 38: 7-30.
Alhakami, A. S., & Slovic, P. (1994). A psychological study of the invers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risk and perceived benefit. *Risk Analysis*, 14(6): 1085-1096.
Ari, E., & Yildiz, Z. (2014). Parallel lines assumption in ordinal logistic regression and analysis approaches. *International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Scientific Research*, 1(3): 8-23.
Dear, M. (1992). Understanding and overcoming the NIMBY syndrome. *Journal of the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58(3): 288-300.
Duncan, W. J. (1981), *Organizational Behavior*(2nd edition). NY: Houghton Mifflin Co.
Engel, M. R. (2007). *When a prison comes to town: Siting, location, and perceived impact of correctional facilities in the Midwest*. Doctoral dissertation of University of Nebraska.
Farrington, K. (1992). The modern prison as total institution? Public perception versus objective reality. *Crime & Delinquency*, 38(1): 6-26.
Finucane, M. L., Alhakami, A., Slovic, P., & Johnson, S. M. (2000). The affect heuristic in judgments of risks and benefits. *Journal of Behavioral Decision Making*, 13(1): 1-17.
Fischhoff, B., Lichtenstein, S., Slovic, P., Keeney, R., & Derby, S. (1980). Approaches to acceptable risk: A critical guide. *Decision Research*.
Fischhoff, B., Slovic, P., & Lichtenstein, S. (1988). Knowing what you want: Measuring labile values. *Decision Making: Descriptive, Normative and Prescriptive Interac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398-421.
Flynn, J., Slovic, P., & Mertz, C. K. (1993). The Nevada initiative: A risk communication fiasco. *Risk Analysis*, 13(5): 497-502.

García, J., Gómez-Quintero, J. D., Marcuello, C., Boira, S., & Eito, A. (2017). Citizen attitudes about the construction of a prison in Spain. Challenge to the concept "NIMBY".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Crime and Justice*, 50: 34-45.

Graesser, A. C., & Nakamura, G. V. (1982). The impact of a schema on comprehension and memory. *In Psychology of learning and motivation* (Vol. 16, pp. 59-109). Academic Press.

Johnson, M. P. (2006). Decision models for the location of community corrections centers. *Environment and Planning B: Planning and Design*, 33(3): 393-412.

Kilburn, J. C., Costanza, S. E., Frailing, K., & Diaz, S. (2014). A paper tiger on chestnut lane: the significance of NIMBY battles in decaying communities. *Urbanities*, 4(2): 3-20.

Martin, R. (2000). Community perceptions about prison construction: why not in my backyard?. *The Prison Journa*l, 80(3): 265-294.

Martin, R., & Myers, D. L. (2005). Public response to prison siting: Perceptions of impact on crime and safety.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32(2): 143-171.

McGeever, K. (2019). Correctional Facility Establishments and Neighborhood Housing Characteristics. *Sociological Perspectives*, 62(3): 383-401.

Peel, M. J., Goode, M. M., & Moutinho, L. A. (1998). Estimating consumer satisfaction: OLS versus ordered probability models. *International Journal of Commerce and Management,* 8(2): 75-93.

Popper, F. J. (1985). The environmentalist and the LULU. *Environment*, 27(2): 7-40.

Rogers, G. O. (1998). Siting potentially hazardous facilities: what factors impact perceived and acceptable risk?. *Landscape and Urban Planning*, 39(4): 265-281.

Slovic, P., & Peters, E. (2006). Risk perception and affect.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5(6): 322-325.

Slovic, P., Finucane, M. L., Peters, E., & MacGregor, D. G. (2002). Risk as analysis and risk as feeling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isk Analysis.* New Orleans, Louisiana, December 10, 2002.

Slovic, P., Finucane, M. L., Peters, E., & MacGregor, D.G. (2004). Risk as analysis and risk as feelings: Some thoughts about affect, reason, risk, and rationality. *Risk Analysis*, 24: 1-12.

Slovic, P., Fischhoff, B., & Lichtenstein, S. (1981). Rating the risks. in Haimes, Y.Y. (eds) *Risk/Benefit Analysis in Water Resources Planning and Management*, 193-217.

Sokolowska, J., & Tyszka, T. (1995). Perception and acceptance of technological and environmental risks: Why are poor countries less concerned?. *Risk Analysis*, 15(6): 733-743.

Trujillo, C. A. (2018). The complementary role of affect-based and cognitive heuristics to make decisions under conditions of ambivalence and complexity. *Plos one*, 13(11), e0206724.

Tversky, A., & Kahneman, D. (1974). Judgment under Uncertainty: Heuristics and Biases: Biases in judgments reveal some heuristics of thinking under uncertainty. *Science*, 185(4157): 1124-1131.

Young, M. G. (1998). Rethinking community resistance to prison siting: results from a community impact assessment. *Canadian J. Criminology,* 40: 323-327.

김 재 식: 건축사 면허를 취득하고, 현재 충남대학교 건축학과 박사학위 과정에 재학 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공공건축, 건축 관련 분쟁 등이며, 최근 발표한 논문으로는 "FGI를 활용한 장기계속공사계약 분쟁 개선방안 기초연구(2023)"가 있다(Email: worldgood@nrf.re.kr).

정 혜 진: 미국 Cleveland State University에서 행정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부산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혁신이론 및 지역경제개발이며, 최근 발표 논문으로는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참여형 국가R&D 과제 경향 분석(2023)", "Exploring the Regional Determinants of the 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s in South Korea: An Entrepreneurial Ecosystem Perspective(2023)" 등이 있다(Email: hjung@pusan.ac.kr).

〈부록〉 응답 표본의 구성

지역(응답자 수)		남성	여성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교정시설 지역	강서 (600)	300	300	120	120	120	120	120
	사상 (600)	300	300	120	120	120	120	120
일반 지역	중구 (31)	17	14	6	5	5	6	9
	서구 (33)	16	17	7	6	7	6	7
	동구 (30)	15	15	4	6	6	6	8
	영도구 (30)	15	15	4	4	6	8	8
	부산진구 (96)	47	49	18	17	19	21	21
	동래구 (68)	33	35	10	12	17	16	13
	남구 (65)	32	33	13	11	14	14	13
	북구 (75)	37	38	13	12	14	18	18
	해운대구 (97)	48	49	15	16	22	24	20
	사하구 (78)	40	38	14	12	15	19	18
	금정구 (57)	28	29	12	9	10	11	15
	연제구 (51)	24	27	8	9	12	11	11
	수영구 (44)	21	23	8	9	9	9	9
	기장군 (45)	23	22	6	9	12	11	7